

한국경제, 저성장 고착화 함정에서 탈출해야

최병일(한국경제연구원 원장)

한국경제의 동력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 2011년 2분기 이후 8분기 연속 1% 미만의 성장을 보인 한국경제는 추경 등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2013년 2분기와 3분기 연속으로 1.1%의 성장을 보이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는 있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미흡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경기침체 극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세계경제는 아직까지 2008년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제대로 회복국면으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 IMF는 2014년 세계경제성장률을 약 3.8%, OECD는 3.6%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000~2007년 평균 4.2%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최근 신흥국의 금융·외환시장 동요에서 보듯이 선진국 출구전략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현실화될 우려도 높다. 게다가 한국제품에 대한 보호주의 공세도 높아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을 보인 과거와 달리 한국경제가 2009~2010년 사이 잠시 회복세를 보인 이후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점도 중요한 문제이다. 1980년 이후 한국경제는 경기순환 저점을 통과한 이후 2년이 지나면 국내총생산은 저점 수준보다 약 18%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총생산은 저점 통과 4년이 지난 2013년 2분기에 겨우 저점 대비 19%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한국경제는 현재 경기순환으로 인한 침체에 더해 대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점이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저성장 고착화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의 상황이 결코 낙관적인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서 간 국가들을 보면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통과 후 3만불을 달성하는데 평균 8년 정도 걸렸다. 뉴질

랜드, 스페인 4년, 이스라엘 5년, 영국은 7년 만에 3만불의 벽을 넘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007년 2만불에 진입한 후 7년이 경과하도록 아직 2만불 중반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는 곧 감소할 전망이다, 부동산시장에서 시작된 자산가격 하락은 디플레이션으로 확대될 가능성마저 보인다. 마치 20여년 전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지면서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일본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이다. 하나 간과해서 안 될 것은 과거 일본은 현재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강했다는 점이다. 1989년 일본의 GDP는 세계 2위였고 1인당 GDP도 세계 6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성장률도 5% 중반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GDP는 세계 15위권이고 1인당 GDP는 30위권이다. 성장률은 3%대를 유지하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만약 한국이 장기불황에 빠진다면 그 충격과 파장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는 비교 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 올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기의식은커녕, 이제 이만큼 성장했으면 저성장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이 팽배해 있지 않나 우려스럽다.

어느 사회이든지 경제성장 덕분에 절대적 빈곤상태를 탈출할 때쯤 되면 어김없이 그간 성장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더 많은 분배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게 된다. 생산성·효율성에 기반한 지속성장정책보다는 재분배정책이 큰 힘을 받게 되고,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게 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그 경제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음을 우린 목격해왔다. 그런 상황을 ‘중진국 함정’이라고 부른다. 사회 전체가 재분배에만 골몰하게 되면 경제성장의 과실을 키우려는 노력보다 타인의 과실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려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혁신의 동력은 뒤쳐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사회 -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사회 - 로 전락 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 신흥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책 우선순위를 효율성 보다는 덜 가진 계층의 몫을 늘리는 것에 두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어졌다. 이런 인기영합주의(populism)를 상쇄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대외 지향성이었다. 글로벌리제이션의 큰 흐름을 타야만 한국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이는 이념을 달리하는 세력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음에도 지속되었다. 글로벌리제이션 기회를 포착하여 성공신화를 만들려는 민간의 도전과 역량확충이 있었기에 한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소득 2만불의 고소득국가의 문턱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노사관계, 지역개발, 환경문제 등 사회갈등 관리 체계 구축에 실패하면서 선진국의 문턱에서 힘겨운 도전을 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한국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대외지향성이 인기영합주의의 거센 물결 속에 소멸되려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성장’이다. 무역과 내수가 동시에 성장을 견인하여 성장-일자리-복지가 연계되는 확대선순환 경제의 정착이 필요하며, 확대선순환 성장이야말로 계층 간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갈등해소형’ 성장이라 할 수 있다.

사회통합형 성장의 핵심은 서비스 빅뱅이다. 일자리의 70%를 책임지는 서비스 분야의 영세성, 후진성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서비스산업을 국내 소비자만을 상대로 하는 우물안 산업이 아닌, 관광, 의료, 문화산업 등 국제적 매력과 경쟁력을 가진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한국에서 비행거리 2시간 내에 있는 3억 소비시장을 타겟으로 내수시장의 국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네거티브시스템(금지가 명문화된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이 허용되는 방식)으로의 규제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 빅뱅을 통해 투자-고용-소득-소비-시장확대-투자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기존의 FTA 성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광역 FTA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일본이 긴 잠에서 깨어나 그간 보호에 안주해 오던 일부집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운을 걸고 경제대국들과의 FTA를 추진하는 마당에, 그동안 일본이 부러워할 만큼의 적극적인 통상정책으로 기업의 해외영토 확장에 열심이던 한국이 왜 별안간 소심해 지는지 알 수 없다.

정부는 고용률 70%라는 숫자에 너무 얽매어 있다 보니 노동시장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고용률 70%는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정책의 결과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강제로 만드는 것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규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나누고 지키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경직된 노사관계를 극복하여 대타협으로 모든 사회주체들을 이끌어야 한다.

확대순환구조를 정착시키는 노력의 출발은 한국경제의 현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시작되고, 그 노력의 핵심은 리더쉽이다. 새로운 비전을 구체화하고 확산하고 공유하면서, 반대와 저항을 설득과 대화를 통해 극복하는 소통과 전략 그리고 끝까지 추진하는 실천력이 바로 지금 한국이 요구하는 리더쉽의 요체이다. 일본이 걸어 들어갔던 ‘잃어버린 20년’을 우리가 반복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